

한국에서 본 전후일본교육의 궤적*

- 교육칙어와 교육기본법의 연속과 불연속 -

박균섭**
kspark@k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4. 2000년대의 교육기본법과 평화헌법의 개정 |
| 2. 구헌법과 교육칙어,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문제 | |
| 3. 1980~1990년대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와 역사교과서 파동 | 5. 논의 및 전망 |

主題語: 전후체제(postwar system), 애국심(patriotism), 교육칙어(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교육기본법(Framework Act on Education), 평화헌법(Pacifist Constitution)

1. 머리말

인류의 삶과 삶의 세계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어 불연속상태를 만들어내고,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불연속의 차원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일본의 근현대사 장면을 보면, 19세기 후반 이래 전쟁을 기준으로 전전·전중·전후를 구분하는 방식, 그 연속·불연속 문제가 깊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20세기 전반의 대부분의 전쟁을 단독으로 일으켰다. 그러나 전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의 근현대사는 전쟁을 키워드로 하여, 그에 대한 여러 논점을 말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정치와 교육의 역학에 대한 해석과 대응, 연속·불연속 문제를 통해 구조적 설명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의 일본 근현대사 장면에서, 특히 전후 70년의 궤적에서 일본의 국체(일본론, 일본인론)와 교육문제에 관해 여러 연속·불연속 현상 및 사태가 전개되었다. 일본은 전전·

* 본고는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2회 국제학술대회(2015년 10월 31일, 일본 규슈대학 이토캠퍼스) 심포지엄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전중에는 구헌법(=대일본제국헌법=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과 교육칙어, 전후에는 평화헌법(=일본국헌법=맥아더헌법=9조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일본과 일본인의 현존과 지향을 제시해 왔다. 문제는 구헌법과 평화헌법, 교육칙어와 교육기본법은 각각 표면적·형식적으로는 불연속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일본의 현실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일본의 보수우익은, 전후에도 평화헌법 이전의 상태와 교육기본법 이전의 상태를 회상하면서 원점회귀를 끊임없이 도모해왔다. 이들은 전후를 살면서도 전전·전중의 세계관과 추억의 지대를 노닐고 있는 것이다.

전후 일본교육의 궤적에 대한 연구는 전후사상과 교육문제, 신자유주의 교육, 애국심 교육, 교육기본법 개정, 교과서 문제, 교육재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본 전후 일본교육에 대해 살피되, 이를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국가를 교육주체로 인식하고 대응했던 전전·전중의 교육칙어체제를 전제하면서 국민을 교육주체로 인식하고 대응했던 전후의 교육기본법체제를 논의함으로써 전후 일본교육의 궤적과 역학을 추적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교육은 전전·전중·전후의 어느 지점에서 연속의 상태(재생, 원점회귀) 또는 불연속의 상태(배제, 실효상실)를 보였는가에 대한 논점을 확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구헌법과 교육칙어,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구헌법(공포 : 1889. 2. 11, 시행 : 1890. 11. 29)은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제국의 헌법이다. 헌법을 공포할 당시 “불멸의 대전(不磨ノ大典)”임을 명시했지만, 구헌법의 효력은 60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구헌법은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도 잠시 기능했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헌법으로 평화헌법(pacifist constitution)이 제정되었다(공포 : 1946. 11. 3, 시행 : 1947. 5. 3).¹⁾ 평화헌법 제2장 제9조에서는 “전쟁의 영구포기(제9조 1항), 전력의 불보유

1) 구헌법 제1조에서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고 하였다. 제3조에서는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할 수 없다(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고 하여 천황의 신격과 면책을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ス)”고 하여 천황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천황의 통치권 수행은 어디까지나 일체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작동하는 것이었다. ‘신성불가침’(제3조)인 천황에게 ‘감히’ ‘불경스럽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히로히토는 당시 군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개전 조칙(1941. 12. 8)에 서명했다. 일본 역사상 쇼와시대의 히로히토처럼 엄청난 파괴와 재앙을 부른 경우는 없었다. 바로 그런 히로히토의

(제9조 2항), 교전권의 불인정(제9조 2항)”을 명시하였다. 평화헌법의 제정과 함께 1947년에 채택되고 발효된 것이 교육기본법이었고, 이는 1890년의 교육칙어를 대체했다.

미군정은 일본의 군국주의 혁파와 민주주의 교육 정착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구현체가 바로 교육기본법(1947. 3. 31)과 평화헌법(1947. 5. 3)의 탄생이었다. 미군정이 주력한 일본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교육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다. 교사들의 노조는 당시 미국에서도 합법이 아니었지만 미군정은 문부성의 견제세력으로 교원노조를 만들 것을 강권했다. 내용적으로도 일본의 전후 교육내용은 철저히 평화·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했다.²⁾ 문부성은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정신을 알기 쉽게 해설한 『새로운 헌법 이야기』(1947)를 발행했다. 『새로운 헌법 이야기』에서 바른 일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행하는 것, 바른 것 이상의 강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 흐름 속에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헌법임과 동시에 아시아인들에게 그 동안 평화와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보험과 같은 것이었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전후 일본에서 전쟁이란 거의 1945년 8월 15일 패전을 맞이했던 과거 대전을 일컬으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는 일본 근현대사의 매우 특이한 장면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³⁾

치세에 ‘쇼와(昭和)’란 이름이 붙은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쇼와’는 “빛과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신’의 지위에서 내려와 ‘인간’임을 선언(1946. 1. 1)한 히로히토는 정작 일반인들과 만났을 때 어색한 표정에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전쟁이란 책임소재가 국가 원수에게 있는 거대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작전 계획까지 손수 챙겼으며, 겉으로만 전쟁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전쟁 관련 정보를 환하게 알고 있던 소수의 외국인만 히로히토가 결코 무능하거나 꼭두각시가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특파원들은 히로히토의 낯은 구두, 초라한 의상, 촌스러운 행동들이 정교하게 짜맞춘 자기 방어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E. Behr(1989) 『Hirohito : Behind the Myth』 유경찬역(2002) 『히로히토 : 신화의 뒤편』 을유문화사, p.364, p.504 ; 박군섭(2010) 「쇼토쿠태자 독법 : 전쟁, 평화, 교육」 『교육사상연구』 24(1), p.38 참조

2) 송현숙(2015) 「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 『경향신문』 2015년2월13일. 1952년 미국의 점령이 종결되면서 보수정권에 의한 전후 교육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다. 보수파와 진보파 쌍방의 대립은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두고 벌어졌다. 무나카타 세이야(宗像誠也)는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며 특히 국가는 국민의 내면 및 가치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55년 문부대신 기요세 이치로(清瀬 一郎)는 교육기본법에 ‘국가’가 빠져있다면 그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무나카타는 교육기본법은 모두로 하여금 ‘국가’ 건설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에 대해 히다가 로쿠로(日高六郎)는 보수파와 진보파 쌍방이 ‘애국심’이라는 동일한 상징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데 히로토·후쿠시마 히로유키·이시다 마사하루(2010)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pp.283-290

3) 朝日新聞(2014) 「戦後69年の言葉 : 祈りと誓いのその先へ」 『朝日新聞』 2014年8月15日社説 ; 야마모토 도시마사(2015)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하여 : 일본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할 그리고 책임」 『기독교사상』 2015년6월호

일본의 1940년대는 미국과의 전쟁, 패배 그리고 종속(GHQ 시대)이라는 대미관계의 시대를 지나 1950년대는 경제부흥의 시대, 1960년대는 미일 안보조약 자동연장 반대투쟁에서 비롯된 정치의 계절 및 고도성장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는 먹고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었던 이들의 시선이 개인의 사적 생활공간으로 옮겨가게 된 내향의 시대, 1980년대는 외수 주도 경제에서 내수 확대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고도정보화시대, 소비형 사회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⁴⁾ 그 과정에서 주목할 한국전쟁(1950. 6. 25~1953. 7. 27)은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한국에서는 비극의 전쟁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전쟁특수(朝鮮特需, 神武景氣)였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일본의 평화헌법의 정체성을 흔드는 첫 계기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맥아더의 지시에 의해,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1952년에는 보안대로 개칭되었으며, 다시 1954년에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Self-Defence Forces)가 조직되었다. 이 때 이미 평화헌법 9조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⁵⁾

1960년대는 일본이 1950년대를 바탕으로 삼아 고도성장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다. 1965년의 한일수교는 한일 국교정상화 및 현대 한일관계의 원점으로 규정되지만 역사인식, 강제동원, 위안부문제 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당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무상원조 3억달러, 재정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달러 등 총 8억달러를 한국 정부에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일본측은 대일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 달러는 한국정부에 피해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했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져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결(2001. 11. 16)을 내린 바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 6월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는 자신이 집필한 고교 교과서 『신일본사』(삼성당)가 문부성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교과서 검정제도가 교육기본법 제10조 및 평화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위헌 소송을 냈다. 『신일본사』에서 난징대학살, 731부대 등 침략행위가 기술된 것을 정부가 문제 삼자 이에 반발해 제소한 것이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 났지만 끝내 위헌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은 일본 사법 역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던 민사소송으로 기록되었다. 1965년 1차 소송에 이어 1967년 2차 소송이, 1984년에는 3차소송이 제기되었다. 마지막 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온 것은 1997년 8월 29일이었다. 하지만 그 지난한 싸움은 자학사관·암흑사관 타파를 주장하던 우익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애쓰는 일본의 양심세력에 영향을 끼친 바도 크다.⁶⁾

4) 김춘미(1992.4)「일본의 영상세대의 삶과 문화」『문화예술』

5) 남경희·박균섭(2002)『일본 『현대사회』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변화 분석』한국교육개발원, p.146

1970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t) 총리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 꿇고 유대인 학살과 전쟁책임에 대해 사죄했다. 빌리 브란트는 그야말로 나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한 나라의 총리로서 사죄를 했을 때, 세계 언론이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난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때 일본에서는 신도정치연맹이 조직되었다. 신도정치연맹의 공식 명칭은 <정신적 지도력을 위한 신도연맹>(Shinto Association of Spiritual Leadership)이다. 이들은 전후일본이 미군정에 의해 말살된 전통문화를 살려 현대 물질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도정신을 통해 국가정책의 근간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000년 6월 모리 요시히로(森義弘) 당시 총리는 신도정치연맹 30주년을 맞이하여 행한 연설에서, 항상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신의 나라”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보수적인 정치가들의 확고부동한,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믿음체계는 전전·전중·전후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였다.⁷⁾

교육기본법은 1947년, 평화헌법과 함께 채택되었지만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은 이에 대해 정서적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대신 전전·전중의 교육정신을 뒷받침했던 교육칙어를 향수어린 심정으로 회상하였다. 그들에게 교육칙어의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는 문구는 교육기본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일본인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육지침으로 여겨졌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

6) 조흥민(2015)「교과서에 거짓말 쓰는 나라」『경향신문』 2015년4월12일. 1913년 육군장교의 아들로 태어나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한 이에나가 사부로(伊能嘉矩)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교단에서 제자들을 전장으로 내보냈다. 당시 그는 일본의 천황제도나 전쟁일본도에 대해 별다른 저항감도 없었다. 그것은 전후 전쟁협력에 대한 죄의식이 싹쓸 수밖에 없는 응어리로 남았다. 이에나가 사부로의 “태평양전쟁 중 나는 그저 회오리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도 전쟁책임이다”는 말은 그의 죄의식의 심층을 보여주는 말이다[이영이(2002)「이에나가 교수가 남긴 것」『동아일보』2002년12월 2일]. 이에나가의 초기역사연구 궤적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내놓은 ‘부정의 논리’(19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쇼토쿠태자(聖德太子)-신란(親鸞)으로 이어지는 ‘부정의 논리’를 갖춘 일본만이 내재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역동적인 지도국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192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동아시아 근대성 논의의 중심주제는 바로 ‘부정’이었다. 결국 부정의 개념은 일본의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근대적 발전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배경이기도 했다[사카이 나오키(2000)「제국적 민족주의와 부정의 역사기술」『근대성의 총력』(국제학술지 <흔적/痕跡/Traces> 서울학술대회, 2000년9월24일, 이화여자대학교) 참조]. 이에나가의 ‘역사 교과서 투쟁’은 40살 전후 스스로의 역사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이에나가의 역사연구가 전전·전중의 ‘부정의 논리’에서 전후의 ‘역사 교과서 투쟁’으로 변환되는 지점에는 그의 전쟁협력에 대한 죄의식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카이 나오키(2010)「문명의 전이와 식민지 근대성, 공개강연(2010년6월13일, 수유너머 남산강의실1) 참조]. 일본 사법 역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던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 그 지난한 역사 교과서 투쟁은 이에나가의 죄의식에 상응하는 속죄의 과정이기도 했다.

7) G. McCormack(2007)『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이기호·황정아역(2008)『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pp.44-46, p.321

까지 기시 노부스케, 다나카 가쿠에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모리 요시히로 등 소위 성공을 거두었다는 총리들은 모두 교육칙어에 존경과 찬사를 표했다.⁸⁾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55년체제라는 말을 쓸 정도로 전쟁국가로 복귀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패전한 일본을 철저한 비군사화 국가로 개조하겠다고던 미국의 의지는 처음부터 무너져 군사대국화로 가게 된 역주행이 70년이나 계속되었다.⁹⁾ 역주행의 과정에서 이미 학교 교육에서 배제·실효상실(1948. 6. 19)된 교육칙어를 다시 불러내려는 의식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칙어가 배제·실효상실된 결과로 일본교육이 황폐화된 만큼 교육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교육칙어의 부활에 있다는 관점이다.¹⁰⁾ 이들은 일본이 미국에 패배함으로써 전후 국가체제가 미국의 입맛대로 만들어졌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이를 미국에 의해 일본이 “탈가벗겨졌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미군정(GHQ)이 만든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고치자는 주장의 근거에는 이런 콤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패배 이전의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새롭게 기댈 곳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왔다.¹¹⁾

3. 1980~1990년대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와 역사교과서 파동

1982년은 중일 국교정상화 10주년이면서 동북아 역사교과서 파동이 발생한 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해이다. 1982년 6월 고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부성이 출판사에 부당한 왜곡(3·1운동을 ‘데모와 폭동’, ‘출병’을 ‘파견’, ‘침략’을 ‘진출’)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일본의 양심세력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였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미야자와담화,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중의 하나인 미야자와 담화는 1982년 8월 당시 미야자와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이를 계기로 문부성은 교과용도서검정기준에 근린 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적시하였다(1982. 11. 24). 이 조항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일 역사 갈등의 안전판 구실을 해왔다.¹²⁾

1945년 5월 8일은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한 날이고,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항복을

8) 위의 글, pp.231-233

9) 이원홍(2015.8)「전후 70년…실패한 미국의 일본개혁 ⑦」『월간경제풍월』

10) 清水馨八郎(2000)『教育勅語のすすめ：教育荒廃を救う道』日新報道

11) 심규선(2001.5)「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 : 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신동아』

12) 김당(2014)「아베의 역사 왜곡 뿌리는 역사교육 의원모임」『오마이뉴스』2014년2월9일

선언한 날이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1985년 5월 8일 바이츠제커(Carl Friedrich von Weizsäcker) 서독 대통령은 서독의회의 종전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독일 국민도 나치의 등장에 책임이 있다”면서 “과거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비인도적인 행위에 감염될 위험에 처하기 쉽다”고 역설했다. 이 장면이야말로 1985년 8월 15일의 일본을 기념할 수 있는 중요한 대비 장면이다. 그 때 일본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재임 : 1982. 11~1987. 1)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외치며 각료들을 이끌고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매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나카소네는 총리로서는 최초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였다.¹³⁾

1986년에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황국사관에 입각하여 제작한 『신편일본사』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어났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1년에 보수우파 종교단체·군인단체에 의해 결성된 단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해 합격시켰다. 이에 대해 우익세력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했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만약 이 교과서가 일선 고교에서 많이 채택되었다면 우익세력의 기세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채택상황을 집계한 결과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¹⁴⁾

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와 함께 진행된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보수우파의원연맹의 활성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계 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¹⁵⁾ 1995-97년은 보수우파 의원연맹의 활성화시기였다. 이들 의원연맹의 활성화는 고노담화(1993. 8)-호소카와발언(1993. 8)-무라야마담화(1995. 8)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과거사 및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담화국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며, 혁신세력에 대한 보수우파의 반동적 움직임(backlash)을 숨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1995년에는 전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보수 회귀 움직임의 정도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1995년 2월 21일에는 <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正しい歴史を伝える國會議員連盟)이 조직되었다. 1996년 6월 4일에는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明るい日本國會議員連盟)이 조직되었다.

1997년 2월 27일에는 자민당 소장파 의원 87명이 모여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會)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역사교

13) Chronology, 1945-2014(PDF)-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pp.10-11

14) 심규선(2001.5)「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 : 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 『신동아』

15) 박철희(2014)「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10, p.95

16) 위의 글, p.93

과서 개정운동을 주도했으며, 스터디 결과물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 : 젊은 국회의원에 의한 역사교과서 문제의 총괄』(『歴史教科書への疑問 : 若手国会議員による歴史教科諸問題の総括』(1997. 12)과 『난징의 실상 : 국제 연맹은 난징 2만명 학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南京の実相 : 国際連盟は南京2万人虐殺すら認めなかった』(2008. 10)를 펴냈다. 보수우파 의원 연맹은 명칭이나 구성 시기와 무관하게 거의 공통된 어젠다를 내세웠다. 이들은 자학사관을 반대하는 입장, 자궁사관을 가르치고자 하는 입장, 황실을 존중하는 입장,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공통점이 있다.¹⁷⁾

1997년 1월 30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설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설립취지문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일본의 아동을 위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역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결의하였다”면서 “전후의 역사교육은 일본인이 계승해야 할 문화와 전통을 잃어버리고 일본인의 긍지를 빼앗아왔다.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일본인이 자지손손 사죄를 계속하는 운명을 짊어진 죄인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암흑사관에 빠져 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들 구성원 중에 역사학을 전공한 학자는 없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문 외적인 이유에서 역사교과서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교학사의 역사교과서도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벤치마킹이라는 지적도 있다.

1997년 5월 30일에는 1974년에 결성된 보수우파 종교단체 <일본을 지키는 모임>(日本を守る会)과 1981년에 결성된 보수우파 종교단체·군인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日本を守る国民会議)가 <일본회의>(日本會議)로 통합·발족하였다. <일본회의>는 기관지로는 매월 『일본의 숨결』(日本の息吹)을 발행하고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誇りある国づくり)”와 “나라를 사랑하는 새로운 국민운동(國を愛する新しい國民運動)”을 모토로 내걸고 있다. <일본회의>는 통합·발족 이래 헌법 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야스쿠니 공식참배 정착, 전전의 천황숭배 부활, 침략전쟁 부정과 재군비, 애국사상 육성, 도덕교육 강화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왔다. <일본회의>는 일본의 보수단체 중에서도 극우파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언론도 <일본회의>를 위협한 우익단체이며 아베 정권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¹⁹⁾ <일본회의>는 히노마루·기미가요 등이 법적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운동을 지휘

17) 위의 글, p.94

18) 심규선(2001.5)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 : 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 『신동아』

하여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공포·시행 : 1999. 8. 13).²⁰⁾ 이는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전후 책임을 강조하거나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강제하는 애국심교육에 반대해온 일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모드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가 상징으로 채택함으로써 근린제국을 자극하고 일본 내의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²¹⁾

일본에서는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공립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등의 행사에서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한 기립·제창 실시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히노마루-기미가요가 상징하고 역사적으로 수행했던 천황제 및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일본인들은 공립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강제적 의례를 거부하고 있고, 특히 이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2007년 이후 최고재판소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 왔다.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강제는 전후 교육정책의 목표를 애국심의 육성에 두고 교육기본법, 학습지도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19) <일본회의>는 이밖에도 미국의 강박에 의한 전후가치관과의 결별, 제2차세계대전의 승자로서의 역사 다시쓰기 및 되돌려놓기, 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등을 내세우고 있다[ビジネスジャーナル(2014) 「安倍内閣と一体の右派組織「日本会議」究極の狙いは徴兵制だった!」 『ビジネスジャーナル』 2014年9月11日; 뉴클라シック(2015) 「ナショナリズム団体「日本会議」の危険性: エコノミスト紙や仏誌が相次いで指摘」 『ニュークラシック』 2015年6月16日]. <일본회의>의 활동계획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 <일본회의>는 일본의 숨결(日本の息吹)에 대해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誇りある国づくり)”와 “나라를 사랑하는 새로운 국민운동(國を愛する新しい國民運動)”이라고 표현한다. 그 나라사랑의 속성을 논하기 전에, 애국심(patriotism)의 어원에 들어있는 파트리아(patRIA)의 의미에 주목할 일이다. 애국심은 애향심의 확대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이고 사건이라는 얘기이다. 나와 이웃과 선조가 살았던 고장에서 마음과 몸과 땅과 사람이 교감하며 정주하는 데에서 애국심도 나올 수 있다[김우창(2011) 『성찰 : 시대의 흐름에 서서』 한길사, pp.714-718].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3월 28일 고시한 소·중학교 대상 신학습지도요령(소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 적용)의 총칙에는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我が國と郷土を愛し)”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애국심 관련 내용은 『도덕』 과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國を愛する心をもつ)”, 『사회』 과목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을 기른다(國を愛する心情を育てる)”고 하였으나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애국심에 관한 사항을 아예 총칙에도 표기하였다[文部科学省(2008) 「新学習指導要領(本文、解説、資料等)」 <http://www.mext.go.jp> : トップ>教育>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新学習指導要領・生きる力>新学習指導要領(本文、解説、資料等)]. 문제는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는 신학습지도요령의 법적 근거는 2006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이라는 데 있다.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의 제정(공포·시행 : 1999. 8. 13) 이래 히노마루-기미가요 제창을 강요하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박군섭(2013) 「47인의 사무라이와 근대일본 : 충군애국 이데올로기의 조립과 주입」 『한국교육사학』 35(3), p.17]. 강요와 압박을 통해서는 마음과 몸과 땅과 사람의 교감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애국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21) G. McCormack(2007) 『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 이기호·황정아역(2008) 『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창비, p.43, p.321

점차 그 개입 강도를 강화해온 일본정부의 극우적 정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²²⁾ 실제로 이 법률은 교육기본법과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황국사관의 성지로 바꾸는 시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법률을 통해 히노마루 계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였고, 일편의 법률조문으로 애국심 교육과 공공성 재건이라는 대의명분을 자아내고 그 효과를 보려는 시도를 감행한 것이다.

4. 2000년대의 교육기본법과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2000년~2003년에 걸쳐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과 일본정치와 전략적 전개에 관한 염원을 담은 지침서를 내놓았다. 그 염원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을 고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일본의 정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²³⁾ 나카소네는 일찍이 총리 재임기간에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교육개혁은 불완전하게 끝났음을 지적하였다. 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문부성(문부과학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기저에는 일본국민 전체의 문명병이 퍼져있다는 것이다. 미군정의 점령 아래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에는 개인을 너무 강조해 공동체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문명병의 요인이라는 얘기였다. 나카소네는 1947년의 교육기본법의 탄생시점에서부터 영미식 개인주의 계열의 가치(권리, 개성,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풍부하게 기술되어있으나 일본식 집단주의 계열의 가치(질서, 규율, 희생, 의무, 책임, 역사, 전통, 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는

22) 권혜영(2015)「일본의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제창 강제와 사상·양심의 자유 : 최고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21(1), pp.269-310. 2007년 최고재판소는 기미가요 피아노반주를 거부한 공립학교 음악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교장의 반주 지시행위는 교사의 사상·양심을 직접 부정하는 외부적 행위가 아니며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징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2011년 최고재판소는 여러 건의 유사판결을 통해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한 부정적 세계관도 보호받을 사상·양심이긴 하지만, 기립제창을 지시하는 직무명령은 그 부정적 세계관에 대한 직접적 제약이 아니라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고 판결하였다. 최고재판소의 일련의 판결은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범위를 넓게 보는 관점(내심설)이 아니라 좁게 보는 관점(신조설)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권혜영(2015)「일본의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제창 강제와 사상·양심의 자유 : 최고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21(1), p.269]. 그러나 위의 판결에는 보충의견이 부기되어있다. “불이익처분을 수반하는 강제가 교육현장을 불신에 빠트리고 위축시킨다면 교육이 생명을 잃고 만다”거나 “강제나 불이익처분은 가능한 한 억제(謙抑)되어야 한다”거나 “국가·국가가 강제적이지 아니라 자발적인 경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다. 법정 의견에 의하면 직무명령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약한다고 인정한 것이다[朝日新聞(2011)「君が代判決：司法の務め盡くしたか」『朝日新聞』2011年6月1日社説].

23) 中曾根康弘(2000)『二十一世紀日本の國家戰略：歴史の分水嶺に立って』PHP研究所；中曾根康弘·竹村健一(2003)『命の限り蟬しぐれ：日本政治に戰略的展開を』徳間書店

거의 없으면서 이를 “중류수=무국적”의 교육기본법이라고 비판하였다.²⁴⁾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적 공헌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보통국가(普通の國/Normal Nation)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국가론은 전후 평화헌법의 가치를 부정·폐기하고 중무장을 표방하겠다는 의미, 군사대국화의 길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전후체제 청산=보통국가 만들기”는 과거 일본의 치부(과거사)를 지우겠다는 몸짓이기도 하다.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이러한 일본의 지향을 미친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쟁광(warmongers)의 개념을 통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다.²⁵⁾ 평화헌법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얻은 재산이며, 그 재산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²⁶⁾

2000년-2007년-2012년의 시계열을 통해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 1차 : 2000, 2차 : 2007, 3차 : 2012)를 작성해온 아미티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제거를 주장해 일본 우경화의 물꼬를 터준 인물이다. 이는 일본 우익이 그토록 갈망하는 헌법 개정과 재무장에 미국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아미티지는 평화헌법의 기존의 자구들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쪽이 낫다는 비슷한 충고를 거듭 내놓았다.²⁷⁾ 2001년 6월 27일에는 일본의 보수국회의원 연맹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歴史教科書問題を考える會)이 결성되었고, 2004년 2월 25일에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한 초당파 의원 연맹인 <교육기본법 개정 촉진위원회>(教育基本法改正促進委員會)가 결성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 6월 10일, 일본의 시민과 지식인들이 <9조모임>(九條の會)을 결성하고 호소문(<九條の會>アピル)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곧 일본이 미국을 따라 “전쟁을 하는 나라(戦争をする国)”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는 나라로 가는 수순임을 명백히 하였다.

일본 군대의 이라크 파병(2004. 1)은 부차적이고 비전투적인 역할이긴 해도 일본이 60년

24) 中曾根康弘(2000)『二十一世紀日本の國家戰略：歴史の分水嶺に立って』PHP研究所；中曾根康弘・竹村健一(2003)『命の限り蟬しぐれ：日本政治に戰略的展開を』徳間書店；G. McCormack(2007)『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이기호·황정아역(2008)『중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참조

25) J. D. Sachs(2015)『Saying no to the warmongers』『The Korea Herald』 July 20, 2015 ; TBSテレビ報道局(2015)『報道特集：戦後70年 歴史家ジョン・ダワーの警告』『TBSテレビ』2015年5月4日

26) 위의 TBSテレビ報道局(2015) 참조

27) 朝日新聞(2003)『集團的自衛權で内閣法制局解釋を批判、米國務副長官』『朝日新聞』2003年9月10日；Takahara Kanako(2004)『U.S. will assist SDF in Iraq, Armitage pledges to Ishiba』『The Japan Times』 Feb. 3, 2004 ; G. McCormack(2007)『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이기호·황정아역(2008)『중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p.127, p.332

만에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였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결정할 때 고이즈미 총리는 평화헌법 전문의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맡고 싶다(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して努めてゐる國際社會において、名譽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는 국가이념에 관한 맹세를 새롭고도 독특하게 해석하여 위헌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를 헌법 본문의 명시적 구절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헌법학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로써 고이즈미는 이전 보수주의자들이 그저 꿈만 꿔던 것, 즉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규군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일본의 이라크 파병(2004-2006)을 평하자면, 이라크에서 수행한 지역적·국지적 선행은 소소했던 반면, 전쟁과 점령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적 지지는 훨씬 심각한 성격을 드러내고 말았다.²⁸⁾

2005년 6월 25일에는 자민당 내의 야스쿠니 참배 자숙론을 뒤로 한 채 <평화를 바라며 진정한 국익을 생각해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平和を願い眞の國益を考え靖國參拜を支持する若手國會議員の會)이 조직되었다. 2006년 4월 19일에 결성된 <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正しい日本を創る會)은 건전한 보수의 육성을 목표로 자주헌법 제정, 교육기본법 조기 개정,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지지 등 우파적인 어젠다를 강력 표방했다. 그들은 이상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일이야말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의 미래에 책임을 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의 길이라고 보았다.²⁹⁾

2006년 4월 15일 오전 7시 무렵,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은밀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였다. 아베는 지난 1기 내각 총리(2006. 9-2007. 9)로 취임하기 직전, 7월 21일에 펴낸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를 통해 “지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해온 일본의 교육 탓에 아이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자학사관을 버리고 일본인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³⁰⁾ “세계에서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모두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나라”, 아베가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지향에 대해 내린 정의이다.³¹⁾ 하지만 그 아름다운 나라는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점령시대를 망각하며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아름다운 나라(対米従属を強化する美しい国)”라는 지적도 있고³²⁾, 자칫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고, 바보

28) G. McCormack(2007)『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이기호·황정아역(2008)『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pp.135-136, pp.216-217, p.343

29) 박철희(2014)「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일본비평』10, p.90, p.92

30) 김윤형(2014)「“자학사관 버리고 자긍심 고취”…아베, 교과서 우경화 착각 진행」『한겨레』2014년 4월 5일

31)安倍晋三(2006)『美しい国へ：自信と誇りのもてる日本へ』文藝春秋

32) 内田樹·白井聡(2015)『日本戦後史論』徳間書店

가 되고, 일본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답지 못한 나라는 비판도 있다.³³⁾ 『아름다운 나라로』의 마지막 장은 “교육의 재생”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의 목표도 교육의 재생이었다. 그것은 아베식의 논법으로 말하자면 “교육의 재생=애국심교육=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국가”였다.³⁴⁾ 일본은 이처럼 위험수역에 있으며 개인의 양심을 유린하는 새로운 국가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³⁵⁾

2007년은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이 6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2007년 3월 1일에는 고노담화(1993. 8)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2007년 4월 5일에는 개헌을 목표로 한 의원연맹인 <신헌법 제정 의원동맹>(新憲法制定議員同盟)이 결성되었다(McCormack, 2007 : 207). <바른 일본을 만드는 모임>(2006. 4. 19)이 제안한 명칭(자주헌법)을 감안하여,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기본 명칭은 “구헌법→평화헌법→신헌법(자주헌법)”의 구도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기본법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해가 바뀌기 직전인 2006년에 개정되었다.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은 설립 총회(1997. 1. 30) 이래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하여 “새로운 교과서=위험한 교과서”를 유포해왔다(俵義文, 2001). 이들 모임은 일본의 교육위기 해결을 위해 교과서 공격의 형태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격의 방법론은 교육기본법에 대한 공격과 함께 국기(日の丸) 계양과 국가(君が代) 제창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러다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 채택률의 저조(2001년=0.039%, 2005년=0.39%)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내부분열이 일어났다. 그 이탈 세력은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아 2006년 10월에 <일본교육재생기구>(日本教育再生機構)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2007년 7월에 <개정교육기본법에 기반을 둔 교과서개선을 추진하는 유식자 모임>(改正教育基本法に基づく教科書改善を進める有識者の会)을 조직하였다.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잔류세력이 후소사(扶桑社)와 법정분쟁 끝에 자유사(自由社)와 손을 잡자, <일본교육재생기구>는 후소사의 자회사인 이쿠호사(育鵬社)를 통해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를 폐내기 시작했다. 이쿠호사의 『새로운 일본의 역사』(新しい日本の歴史)와 자유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新しい歴史教科書)는 2011년 3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하였다.³⁶⁾ 자유사와 이쿠호사의 편집방침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일본교육재생기구>는 자유사·이쿠호사 이외의 교과서에는 “유해첨가물=독”이 들어있다고 규정한다. 그들은 반전평화,

33) 日刊ゲンダイ(2007)「安倍晋三の愚鈍愚図には、ほとほと呆れる」『日刊ゲンダイ』2007年2月12日
 34) 高橋哲哉·俵義文·石山久男·村田智子(2005)『とめよう!戦争への教育：教育基本法「改正」と教科書問題』学習の友社
 35) 週刊金曜日編集部(2006)『日本はどうなる 2007：暴走する国家に抗うための論点』金曜日
 36) 大阪歴史科協議會(2011)『「新しい歴史教科書」を引きぐ自由社版・育鵬社版歴史教科書の採擇に反對する聲明』『日本史研究』588, pp.85-87; 歴史學研究會(2011)「緊急アピール：育鵬社版、自由社版教科書は子どもだちに渡せない」『日本史研究』588, pp.88-90

호헌, 핵폐기, 아이누/재일외국인 차별철폐, 환경보호/지구시민 활동 등을 모두 교과서에 넣지 말아야 할 유해첨가물이나 독극물로 규정하면서 교과서를 공격하고 있다.³⁷⁾ 교육재생을 통해 일본재생을 꿈꾼다(“教育再生から日本再生”)는 그들의 의도란 그런 것이었다.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는 자민당 등 일부 정치세력과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극우세력이 교과서에 집착하는 것은 교과서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위대 해의 파병을 위한 헌법 개정과 국가에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야심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³⁸⁾ 다와라는 2011년 3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유사판과 이쿠호사판 교과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역사교과서는 고대사에서는 한국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근현대사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 애초부터 이들의 목적은 바른 교과서 출판이 아니라 정치물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다와리는 일본에서 전개된 교과서 전쟁의 역사에 대해, 극우파들의 교과서 편향 공격은 1955년 1차 공격(2년 만에 종식), 1980년 2차 공격(2년 반 만에 종식), 1996년 3차 공격(1996년부터 15년이나 계속)이 있었다면서, 3차 공격의 특징은 정치인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문화인이나 학자들이 주도해 마치 시민운동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⁴⁰⁾

교육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 자민당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오른쪽이었다고 하는 아베 자민당 내각인데, 이를 계승해 2012년 실선에 오른 것이 자민당을 대신해 등장한 민주당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민주당 정권 출범과 더불어 그들의 우선회는 과거의 자민당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⁴¹⁾ 그러다가 2012년 12월 26일 아베 2기 내각(2012. 12. 26~현재)이 출범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다. 2기 내각의 정권구상을 담은 『새로운 나라로』(2013)는 1기 내각의 정권구상을 담은 『아름다운 나라로』(2006)의 완전판에 해당한다.⁴²⁾ 아베는 1기 내각에서 총리의 자리를 1년밖에 지키지 못하고 2012년 12월, 재도전에 성공한 것에 대한 자괴와 자만이 있었다. 아베는 실족을 경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위주로 성을 쌓았다. 그 성에 모여들어 아베를 지켜주는 절대다수가 격렬한 보수우파였다.⁴³⁾

37) 子供と教科書全国ネット21(2012)『育鵬社教科書をどう読むか』高文研, p.164

38) 조선일보(2011)「일 왜곡 교과서와 3차 대선 중…채택률 0% 목표로 싸우겠다 : 일 시민단체 다와라 국장 “실제 채택률 1.7%에 불과”」『조선일보』2011년6월10일

39) 위의 기사

40) 위의 기사

41) 권혁태(2012)「일본을 오른쪽으로 메치는 무도 교육의 복권」『한겨레21』2012년4월26일

42) 安倍晋三(2006)『美しい国へ：自信と誇りのもてる日本へ』文藝春秋；安倍晋三(2013)『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完全版-「強い日本」を取り戻すために』文藝春秋

43) 이원홍(2015)「전후 70년…실패한 미국의 일본개혁 ⑦」『월간경제풍월』2015년8월호

일본의 정치주도형 교육개혁에 대해 위기감을 가진 학자들이 개혁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교육개혁의 여러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⁴⁴⁾ 하지만 아베 내각은 2013년 1월 15일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실행회의>를 정식 설치하고, 우익 성향의 보수 논객과 개헌·교육 문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사를 중심으로 교육재생의 실천에 나섰다. 교육재생이 자칫 병적인 우경화와 연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 2013년 4월 12일 아베 총리가 ‘731’을 필승의 아이টে็ม으로 삼아 득의만면의 포즈를 취한 사진 한 장이다.⁴⁵⁾ 이 사진 한 장은 교육재생의 본의를 순수하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5. 논의 및 전망

20세기 전반 700만명의 일본군은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공격 임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일본군은 대부분의 전쟁을 단독으로 일으켰고 그로 인해 2천만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다. 1945년 패전 당시 일본의 평균수명(참고값)은 남성 23.9세, 여성 37.5세였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에 대한 논법은 적의 공격에 저항하거나,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거나, 도적과 테러범과 군벌에 대항하여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위였을 뿐이라고 말한다.⁴⁶⁾ 그 논리에 따라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라는 문구는 사라지고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식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다. 히다카 로쿠로(日高六郎)는 “만약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았다면 ‘침략’을 가르쳤던 교과서가 잘못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침략’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교과서에 관한 역사인식의 바닥을 꼬집었다.⁴⁷⁾ 하지만 ‘침략’을 ‘진출’로 여기는 정신구조의 연속에서 침략여부를 구분하는 작업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천황제의 구조는 대동아성이상국(大東亞聖理想國)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대동아성이상국의 천황의 군대에 의한 전쟁이었다면 전쟁의 최고책임은 천황의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질수밖에 없다.⁴⁸⁾ 그러나 전전·전중·전후의 연속성은 전쟁에 책임을 지는

44) 藤田英典·尾木直樹·喜多明人·佐藤学·中川明·西原博史(2007)『誰のための「教育再生」か』岩波書店；
藤田英典(2014)『安倍「教育改革」はなぜ問題か』岩波書店

45) Kim, Sarah(2013)「Abe's pose resurrects horrors of Unit 731」『Korea JoongAng Daily』May 15, 2013

46) G. McCormack(2007)『Client State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이기호·황정아역(2008)『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p.132；朝日新聞(2014)「戦後69年の言葉：祈りと誓いのその先へ」『朝日新聞』2014年8月15日 社説

47) 2001년 3월 23일, 사민당 주최 원내집회. 심규선(2001)「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 : 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신동아』2001년5월호 재인용

48) 鈴木貞美(2009)『戦後思想は日本を讀みそこねてきた : 近現代思想史再考』平凡社, pp.40-42

자가 없는 무책임정치체제였다.⁴⁹⁾

일본의 보수우익의 언동에 힘이 실리는 데는 여러 외적 요소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우익 성향을 강화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서는 일련의 국제정세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먼저 미국이다. 미국 백악관은 아베 담화(2015. 8. 14)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평화,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으며 이런 기록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직접적인 사과가 생략된 아베의 담화에 대해 어떤 단서도 달지 않고 전체를 환영한 것이다.⁵⁰⁾ 웬디 셔먼(Wendy Sherman)의 발언(2015. 2. 17)은 동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선언(2011. 11)한 이래의 미국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에 대해, 취약한 정권의 내부문제 호도책 정도로 여기면서, 동아시아의 진전을 막고 마비를 초래하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한국과 중국이라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⁵¹⁾ 아베의 호전적 제스처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본심과도 일치한다. 일본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이상 미국은 강한 일본을 필요로 한다.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일동맹이야말로 아시아의 버팀목이라는 데 있다.⁵²⁾

다음으로는 일부 아시아 국가가 과거 일제 침략에 대한 역사적 양금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기대는 전략으로 돌아섰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지지한다는 입장이다.⁵³⁾ 중국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우려가 일본의 전쟁행위에 대한 기억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근혜대통령은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5년 9월 28일 : 현지시각)에서 “일본에서 통과된 방위안보법률(안보법안)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우익언론은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안보법안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면서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⁵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일본의 전쟁행위에 대한 역사적 양금을 드러내지 않고 일본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49) 박근섭(2010)「쇼토쿠태자 독법 : 전쟁, 평화, 교육」『교육사상연구』24(1), pp.33-51

50) The Wall Street Journal(2015) 「Abe's Mixed Apology : Why it still matters if Japan whitewashes its war crimes」『The Wall Street Journal ASIA』 Aug. 16, 2015 ; 국민일보(2015)「“담화 환영, 일본은 모든 국가 모델” 미국 수상하다」『국민일보』2015년8월15일

51) A. Gale(2015)「South Korea's Weak Hand in Pressing Japan on the War」『The Wall Street Journal』Apr. 27, 2015

52) R. L. Armitage & J. S. Nye(2012)『The U.S.-Japan Alliance : Anchoring Stability in Asia』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53) D. Pilling & R. Landin & J. Soble(2012)「Philippines backs rearming of Japan」『The Financial Times』Dec. 9, 2012

54) 讀賣新聞(2015)「中韓國連演說「反日宣傳」利用を憂慮する」『讀賣新聞』2015年9月30日社説

있다는 점을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발 일본·일본인·일본문화론도 일본의 보수우익의 행보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맥그레이(M. McGray), 조셉 나이(Joseph S. Nye), 기 소르망(Guy Sorman) 등의 진단과 주장은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의 일본을 경제 아닌 문화와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준거를 제공하였고, 그 표현양상은 쿨-재팬(Cool Japan=Kūru Japan)의 등장이었다.⁵⁵⁾ 맥그레이와 조셉 나이의 덕분에 일본문화의 매력으로 무도 관련 서적이 베스트 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톰 크루즈(Tom Cruise) 주연의 <라스트 사무라이>(The Last Samurai, 2003)가 흥행한 것도 흐름을 같이한다. 개정교육기본법(2006)에 이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新しい学習指導要領)에 따라 2012년부터 “전통과 문화에 관한 교육을 충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중학교에서 남녀 모두 일본의 전통문화가 갖는 <무도>를 필수로 가르치게 된 것도 교육현장의 판도 변화를 보여준다.⁵⁶⁾

다음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들 수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의 발생사는, 전후 전직 식민지관료에 의한 『회고록』의 간행, 전직 식민지 교사의 『일대기』 출판 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수탈론이 아닌 근대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1990년대 후반에는 자유주의사관그룹[1995년 1월,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가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결성한 데서 시작된 명칭]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에 의한 실증적 수법을 이용한 연구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1990년대에 들어와 집중된 식민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미화하는 이론장치로 기능하였다. 그 장치는 침략과 지배로 인한 피해국과 피해자를 방치·소비·이용하는 뒤틀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⁵⁷⁾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해방 후 한국의 산업화가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노력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모태로 삼아 돌출하는 이들의 망언은 과거사(일본의 침략사)는 이제 내려놓자는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망언은 점과 선의 돌출상태를 넘어 활동공간/대치전선을 넓혀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일본의 교육학자들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야스쿠니시스템이나 애국심교육을 위한 도덕부교재 『마음의 노트』(心のノート) 작성 등은 식민지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의

55) D. McGray(2002)「Japan's Gross National Cool」『Foreign Policy』130, pp.44-54

56) 竹島博之(2011)「新自由主義と愛國心教育：安倍政権の教育改革を中心に」『東洋法學』55(2), pp.49-72 ; 권혁태(2012)「일본을 오른쪽으로 메치는 무도교육의 복권」『한겨레21』2012년4월26일 ; 内田樹(2010)『武道的思考』筑摩書房

57) 大森直樹(2003)「東アジア教育・文化研究交流の課題：国際シンポジウム・フィールドワーク「東アジアにおける植民地主義の現在と過去」をふまえて」『季刊教育法』137, pp.92-99

교육학자들은 이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많은 교육학자들이 내심 일본의 근대교육(전전·전중의 교육)을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의 근대교육이 성공했다는 전제는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식민지교육은 일본 근대교육의 연장 및 일부로 파악될 수밖에 없고, 식민지에 근대교육을 파급시켰다는 시혜의 논리로 이어지며, 근대교육의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식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논설로 갈 수밖에 없다.⁵⁸⁾

일본의 정치인들은 1945년 이전 자국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형식적인 반성과 사과 발언을 해 왔지만 돌아서서 부인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일본은 독일과 같은 자아성찰(soul-searching)을 보일지라도 내부에서는 이를 자학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정치적 차원의 성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⁵⁹⁾

아베 담화(2015. 8. 14)의 핵심문장을 보면, “전후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애통한 마음을 포함과 아울러 영원히 애도의 뜻을 바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국내외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전범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전칭 진술이다. 구체적인 식민지배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을 특칭하고 있지 않다.⁶⁰⁾ 아베 담화의 “이제 일본도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인구의 8할을 넘고 있다. 과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아들이나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사죄의 숙명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은 가장 논점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다른 문장들과 달리 주어(일본), 논거(전후세대가 8할), 주장(사죄의무 없음)을 다 갖추면서 아베의 진심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히 드러나 있다. 핵심은 전후세대는 사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⁶¹⁾ 과연 그런가.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t) 전 총리가 1970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고 유대인 학살과 전쟁책임에 대해 사죄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빌리 브란트는 그야말로 나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당시 세계 언론이 찬사를 보낸 것은 나치와 아무 상관없는 그가 독일을 대표해 과거의 잘못된 서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새로운 서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⁶²⁾

교육기본법 개정 그리고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 사실상 전쟁으로 가는 교육(戦争をする國, 戦争ができる國)을 실시하겠다는 발상을 의미한다.⁶³⁾ 아베 내각은 주권자를 경시하는

58) 위의 글

59) E. Epstein(2015)「Do They Really Feel Remorse?」『The Weekly Standard』Aug. 4, 2015

60) 하지율(2015)「아베 담화의 소름 돋는 한 문장 : 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험한 까닭」『오마이뉴스』2015년 8월15일

61) 하지율(2015)「아베 담화의 소름 돋는 한 문장 : 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험한 까닭」『오마이뉴스』2015년 8월15일 ; 박석원(2015)「아베 담화, 그 후 자민당 풍경」『한국일보』2015년9월4일

62) 하지율(2015)「아베 담화의 소름 돋는 한 문장 : 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험한 까닭」『오마이뉴스』2015년 8월15일

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인 바꿔 읽기(言葉の読み替え), 말 바꾸기(言い換え), 억지 주장(強弁)을 통해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戦争をしない国)”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戦争ができる国)”로 치닫고 있다. 그것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며,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⁶⁴⁾ 이처럼 일본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戦争ができる国づくり)”를 향한 움직임이 거세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이어 신헌법(자주헌법) 제정을 목표로 평화헌법 이탈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제 시대의 근저를 묻는 성찰과 논의가 요망된다. 그래야만 ‘마음’과 ‘국가’와 ‘전쟁’으로 연결되는 회로를 끊을 수 있고, 위기의 징후를 제대로 감지하여 대응할 수 있다.⁶⁵⁾

한국의 정치지형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구도를 특징으로 하지만, 특히 광복 60주년 장면과 광복 70주년 장면 사이의 10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전후 60년과 전후 70년의 차이는 그리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한국의 산업화-민주화 구도와는 달리 일본의 정치지형은 개헌-호헌의 구도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후체제를 탈피하는 구도이다. 미일방위협력지침(guide line/war manual)은 일본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엄연한 “전쟁교본”이다. 일본은 교육기본법 개정에 이어 국제정세의 문제를 들어 평화헌법 개헌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가 일본의 군사력이 세계로 “진격”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사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베 내각의 전쟁법안은 이미 동아시아 위기 조성에, 한국에 대한 음흉한 견제에 이용되고 있다.⁶⁶⁾ 그러면서도 애국심, 교육재생, 731포즈를 하나의 계열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재생)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전·전중·전후의 문제는 전후 70년동안 근린제국 한국과 중국의 간여나 비난에 따라 일본이 반응을 내놓는 패턴이 지속되어왔다. 이는 20세기 전반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 전후 70년동안 일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근린제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을 계속해왔다는 말이기도 하다. 본질을 말하자면, 교과서 파동, 야스쿠니 참배, 교육기본법 개정, 호헌-개헌 문제 등은 한일(韓日) 간의 문제나 중일(中日)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일(日日) 간의 문제이다.⁶⁷⁾ 일본 내의 정치적 성숙과 협동적·지성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만 전전·전중·전후의 문제에 책임 있게 임하는 일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63) 高橋哲哉·俵義文·石山久男·村田智子(2005)『とめよう!戦争への教育：教育基本法「改正」と教科書問題』学習の友社

64) 朝日新聞(2014)「戦後69年の言葉：祈りと誓いのその先へ」『朝日新聞』2014年8月15日社説

65) 高橋哲哉(2003)『「心」と戦争』晶文社；大森直樹(2009)「愛国心教育」と侵略戦争：東アジア教育文化学会第5回国際學術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季刊教育法』161, pp.106-113

66) 이원홍(2015)「전후 70년…실패한 미국의 일본개혁 ⑦」『월간경제풍월』2015년8월호

67) 심규선(2001)「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신동아』2001년5월호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른 일본, 강한 일본, 아름다운 일본, 새로운 일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새로운 헌법 이야기』(1947)에 등장하는 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는다.

이번 헌법은……전쟁을 하기 위한 것은 일체의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바른 일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행한 것뿐입니다. 세상에서 바른 것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こんどの憲法では……戦争をするためのものは、いっさいもたない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みなさんは、けっして心ぼそく思うことはありません。日本は正しいことを、ほかの國よりさきに行ったのです。世の中に、正しいことぐらい強いものはありません)

{文部省(1947) 『新しい憲法のはなし』、六、 『戦争の放棄』}

【參考文獻】

- 권혁태(2012)「일본을 오른쪽으로 메치는 무도교육의 복권」『한겨레21』2012년4월26일
- 권혜영(2015)「일본의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에 대한 기립·제창 강제와 사상·양심의 자유 : 최고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헌법학연구』21(1)
- 김윤형(2014)「“자학사관 버리고 자긍심 고취”…아베, 교과서 우경화 착착 진행」『한겨레』2014년4월5일
- 김 당(2014)「아베의 역사 왜곡 뿌리는 역사교육 의원모임」『오마이뉴스』2014년2월9일
- 김우창(2011)『성찰 : 시대의 흐름에 서서』한길사
- 김춘미(1992)「일본의 영상세대의 삶과 문화」『문화예술』1992년4월호
- 남경희·박균섭(2002)『일본 『현대사회』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변화 분석』한국교육개발원
- 박균섭(2010)「쇼토쿠태자 독법 : 전쟁, 평화, 교육」『교육사상연구』24(1)
- _____ (2013)「47인의 사무라이와 근대일본 : 충군애국 이데올로기의 조립과 주입」『한국교육사학』35(3)
- 박석원(2015)「아베 담화, 그 후 자민당 풍경」『한국일보』2015년9월4일
- 박철희(2014)「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일본비평』10
- 송현숙(2015)「광복 70주년 기획 : 우리는 과연 해방됐는가」『경향신문』2015년2월13일
- 심규선(2001)「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정체 : 극우파 지식인들의 국수주의 부활 행동대」『신동아』2001년5월호
- 이영이(2002)「이어나가 교수가 남긴 것」『동아일보』2002년12월2일
- 이원홍(2015)「전후 70년…실패한 미국의 일본개혁 ⑦」『월간경제풍월』2015년8월호
- 조홍민(2015)「교과서에 거짓말 쓰는 나라」『경향신문』2015년4월12일
- 하지율(2015)「아베 담화의 소름 돋는 한 문장 : 일본 총리의 진심이 위협한 까닭」『오마이뉴스』2015년8월15일
- 국민일보(2015)「“담화 환영, 일본은 모든 국가 모델” 미국 수상하다」『국민일보』2015년8월15일
- 조선일보(2011)「일 왜곡 교과서와 3차 대전 중·채택률 0% 목표로 싸우겠다 : 일 시민단체 다와라국장 “실제 채택률 1.7%에 불과”」『조선일보』2011년6월10일
- 사카이 나오키(2001)「제국적 민족주의와 부정의 역사기술」『근대성의 충격』(국제학술지<흔적/痕迹/Traces> 서울학술대회, 2000년9월24일, 이화여자대학교)
- _____ (2010)「문명의 전이와 식민지 근대성」공개강연(2010년6월13일, 수유너머 남산강의실1)

- 야마모토 도시마사(2015)「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하여 : 일본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역할 그리고 책임」『기독교사상』2015년6월호
- 이데 히로토·후쿠시마 히로유키·이시다 마사하루(2010)「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교과서위원회편『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安倍晋三(2006)『美しい国へ：自信と誇りのもてる日本へ』文藝春秋
_____ (2013)『新しい国へ：美しい国へ完全版-「強い日本」を取り戻すために』文藝春秋
- 内田樹(2010)『武道的思考』筑摩書房
- 内田樹·白井聡(2015)『日本戦後史論』徳間書店
- 大阪歴史科学協議會(2011)「『新しい歴史教科書』を引きく自由社版·育鵬社版歴史教科書の採擇に反對する聲明」『日本史研究』588
- 大森直樹(2003)「東アジア教育·文化研究交流の課題：国際シンポジウム·フィールドワーク「東アジアにおける植民地主義の現在と過去」をふまえて」『季刊教育法』137
_____ (2009)「『愛国心教育』と侵略戦争：東アジア教育文化学会第5回国際學術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季刊教育法』161
- 清水馨八郎(2000)『「教育勅語」のすすめ：教育荒廃を救う道』日新報道
子供と教科書全国ネット21(2012)『育鵬社教科書をどう読むか』高文研
- 高橋哲哉(2003)『「心」と戦争』晶文社
- 高橋哲哉·俵義文·石山久男·村田智子(2005)『とめよう!戦争への教育：教育基本法「改正」と教科書問題』学習の友社
- 鈴木貞美(2009)『戦後思想は日本を読みそこねてきた：近現代思想史再考』平凡社
- 竹島博之(2011)「新自由主義と愛国心教育：安部政権の教育改革を中心に」『東洋法學』55(2)
- 俵義文(2001)『徹底検証あぶない教科書：「戦争ができる国」をめざす「つくる会」の実態』学習の友社
- 中曾根康弘(2000)『二十一世紀日本の國家戦略：歴史の分水嶺に立って』PHP研究所
- 中曾根康弘·竹村健一(2003)『命の限り蝉しぐれ：日本政治に戦略的展開を』徳間書店
- 文部省(1947)『新しい憲法のはなし』文部省
- 藤田英典·尾木直樹·喜多明人·佐藤学·中川明·西原博史(2007)『誰のための「教育再生」か』岩波書店
- 藤田英典(2014)『安倍「教育改革」はなぜ問題か』岩波書店
- 週刊金曜日編集部(2006)『日本はどうなる 2007：暴走する国家に抗うための論点』金曜日
- 歴史學研究會(2011)「緊急アピール：育鵬社版、自由社版教科書は子どもたちに渡せない」『日本史研究』588
- 朝日新聞(2003)「集團的自衛權で内閣法制局解釋を批判、米國務副長官」『朝日新聞』2003年9月10日
_____ (2011)「君が代判決：司法の務め盡くしたか」『朝日新聞』2011年6月1日 社説
_____ (2014)「戦後69年の言葉：祈りと誓いのその先へ」『朝日新聞』2014年8月15日 社説
- 讀賣新聞(2015)「中韓國連演說「反日宣傳」利用を憂慮する」『讀賣新聞』2015年9月30日 社説
- 日刊ゲンダイ(2007)「安倍晋三の愚鈍愚図には、ほとほと呆れる」『日刊ゲンダイ』2007年2月12日
- ビジネスジャーナル(2014)「安倍内閣と一体の右派組織「日本會議」究極の狙いは徴兵制だった!」『ビジネスジャーナル』2014年9月11日
- ニュークラシック(2015)「ナショナリズム団体「日本會議」の危険性：エコノミスト紙や仏誌が相次いで指摘」『ニュークラシック』2015年6月16日
- TBSテレビ報道局(2015)「報道特集：戦後70年 歴史家ジョン·ダワーの警告」『TBSテレビ』2015年5月4日
- 文部科学省(2008)「新学習指導要領(本文、解説、資料等)」<http://www.mext.go.jp> : トップ>教育>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新学習指導要領·生きる力>新学習指導要領(本文、解説、資料等)(2013年8月24日引出)

- Armitage, R. L. & Nye, J. S.(2012)『*The U.S.-Japan Alliance : Anchoring Stability in Asia*』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Behr, E.(1989)『*Hirohito : Behind the Myth*』유경찬역(2002)『히로히토 : 신화의 뒤편』을유문화사
- Epstein, E.(2015)「Do They Really Feel Remorse?」『*The Weekly Standard*』Aug. 4
- Gale, A.(2015)「South Korea's Weak Hand in Pressing Japan on the War」『*The Wall Street Journal*』Apr. 27
- Kim, Sarah(2013)「Abe's pose resurrects horrors of Unit 731」『*Korea JoongAng Daily*』May 15
- McCormack, G.(2007)『*Client State : Japan in the American Embrace*』이기호·황정아역(2008)『중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창비
- McGray, D.(2002)「Japan's Gross National Cool」『*Foreign Policy*』130
- Pilling, D. & Landingin, R. & Soble, J.(2012)「Philippines backs rearming of Japan」『*The Financia Times*』Dec. 9
- Sachs, J. D.(2015)「Saying no to the warmongers」『*The Korea Herald*』July 20
- The Wall Street Journal(2015)「Abe's Mixed Apology : Why it still matters if Japan whitewashes its war crimes」『*The Wall Street Journal ASIA*』Aug. 16
- Takahara, Kanako(2004)「U.S. will assist SDF in Iraq, Armitage pledges to Ishiba」『*The Japan Times*』Feb. 3

<BLOG>

Chronology, 1945-2014(PDF)-Reischaue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http://rijs.fas.harvard.edu/crrp/papers/pdf/Chronology-Oct1945_Dec2014.pdf.

<WEBSITE>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
子どもと教科書全国ネット21. <http://www.ne.jp/asahi/kyokasho/net21/>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 <http://www.tsukurukai.com/>
日本教育再生機構. <http://www.kyoiku-saisei.jp/>
育鵬社 <http://www.ikuhosha.co.jp/>
9條の會 <https://www.9-jo.jp/>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한국에서 본 전후일본교육의 궤적

- 교육칙어와 교육기본법의 연속과 불연속 -

한국의 정치지형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구도를 특징으로 하지만, 특히 광복 60주년 장면과 광복 70주년 장면 사이의 10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전후 60년과 전후 70년의 차이는 그리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한국의 산업화·민주화 구도와는 달리 일본의 정치지형은 개헌·호헌의 구도가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후체제를 탈피하는 구도이다. 그러면서도 애국심, 교육재생, 731포즈를 하나의 계열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재생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본질을 말하자면, 교과서 파동, 야스쿠니 참배, 교육기본법 개정, 호헌·개헌 문제 등은 한국이나 중국과 갈등을 일으킬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 내의 정치적 성숙과 협동적·지성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만 전전·전중·전후의 문제에 책임 있게 임하는 일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른 일본, 강한 일본, 아름다운 일본, 새로운 일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A Study on the Trajectory of Postwar Japan's Education from Korea's Perspective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

Korea's politics are characterized the composition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 need to observe the change of the ten years, especially sixtieth and seventie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Day. Meanwhile, there seems no specific meaning the difference of the postwar period sixtieth and seventieth in Japan. Unlike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Japan's politic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amendment and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It is simply an avoidance of postwar system. But at the same time, they present belonging to the same language such as patriotism, renewal of education and 731 postures. That is why the renewal of education is dangerous. Speaking of essence, the problems of history textbook, Yasukuni Shrine, framework act on education, pacifist constitution and so on are domestic problems of Japan rather than the problems of Korea-Japan or China-Japan. Japan has to solve the problems by means of political maturity and the cooperative and intellectual interaction. We can say that is Japanese posture which deal with the responsibility about the issues of prewar, wartime, and postwar. That is the way to proceed to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right Japan, strong Japan, beautiful Japan and new Japan.